



‘노동개혁’ 법안심사 재개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철회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관련 기사 2~3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8~10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시리아 전쟁의 성격과
반전운동의 과제

4면

폭격은
더 많은 테러를 부를 뿐
전쟁 반대

4~5면

왜 프랑스는
아이시스의
표적이 됐는가?

13면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시민적 권
리의 전쟁’

6~7면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16면

프랑스 지방선거
파시스트에 맞선
투쟁이 시급하다

12면

누구의 딸일까요?

“동명이인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영동한 사람을 알카에다
고위간부로 오인해 지난 13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한 것에 대해 2일 제시한 해명.
관타나모에는 여전히 1백7명이 수용돼 있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가. 경제살리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백
날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 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어느새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 이제 한숨금지법도 만들 기세

“꿈꿨는데 계속 ‘먹어라 먹어라’ 한다고
병이 낫겠느냐. [경제] 체질을 우선 고쳐야
한다.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구조조정을
해야경제 체질이 튼튼해지지 않겠느냐.”

박근혜, 너 땀에 얹다 죽을 판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
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IS
도 알아버렸다.”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하는 박근혜,
우주의 기운이 알려 준 급보?

“헝그리정신이 없어졌기 때문”
전경련 상무 임상혁, 한국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세상은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명박, 너만?

“카카오톡 등으로 지역예산 반영해 달
라고 하면서, 법안[과] 예산 연계하면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
안민석의 푸념

“변성호 위원장 등 일부 전교조 인사는
북한에서나 쓰는 ‘인민’이란 단어를 스
스럼없이 사용한다.”

《동아일보》

‘인민’을 인민으로 알고듣고도 나 몰라라

“국가기관보다 해외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니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살인 진압 피해자 백남기 씨의 딸 민주화 씨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종하는 행
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만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북면금지법 통과 전에 이미 양형 올리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법치주의

“광화문 광장을 없애야 된다 … 세상에
이런 난장판이 어디있나? 국정원을 없
애고 국가보안법도 없애자는, 북한 지
도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위대”

새누리당 박인숙,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는 게 꼭 ‘박근혜 스타일’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김문성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
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
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
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
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
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
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살려 놔
야지.”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
본법, 기업활력법 등 즉시 통과시키
려는 법안들이 경제 위기 심화 속에
서 ‘기업 살리기’를 위한 것임을 노골
적으로 밝힌 것이다. 특히 고통전가
를 위한 노동 개악 입법화에 기업주
와 정부, 여당이 얼마나 목매고 있는
지 보여 준다. 한국 경제 상태가 심상
치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기업
살리기’ 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박근혜는 테러방지법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테러방지법조차 없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되겠는가.”
“훈이 비정상”인 것 같은 어처구니없
는 사고이지만, 집회에 참가해 마스
크를 썼다고 시위대를 ‘테러리스트’
에 비유하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강조하는 것은 이 법이 정치적 반대
자들에 대한 단속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박근혜는 경제 위기가 본
격적으로 깊어지는 국면에서 이에 대
한 저항을 막으려고 친기업 · 반노동
악법을 제정하고 억압 조치를 강화하
는 것이다. 이것이 민중총궐기 살인
진압과 이후 민주노총에 대한 집중

새누리과 새정치연합의 부당 거래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고,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서 총선용
지역구 예산을 챙기려는 새정치연합
의 요구를 들어 줬다. 이미 예산 “증액
심사는 ... 밀실 흥정으로 전락 ...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 거대 양당과 정부의
‘익숙 챙기기’ 부당 거래로 변질되고 있
[었다].”(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정의
당 서기호 의원의 11월 27일 브리핑)

그래서 새누리당이 개악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예산 수정 논
의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새정치연합이 12월 2일 원내대표
간 밀실 합의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
었던 것이다. 바뀐 국회법은 정부 예
산안이 의결 시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결국 총 3조 5천억 원이 ‘선거용’ 예
산으로 자리바꿈했다. 그 대가로 관
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
과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
방지법, “노동 개혁” 법안 등도 통과
될 위험이 커졌다.



새누리민주야합? 전체를 보면 야합의 기운이 온다.

탄압의 배경이다.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를 포함
한 8개 노조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위원장 등 조합원에 대한 구속과 체
포영장 남발, 독재정권 때나 쓰던 형
법상 소요죄를 끄집어내 민주노총을
폭동단체로 몰아가기 등.

강공

이런 강경 탄압은 살인 진압 면피
용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전에 기
선을 제압해 ‘노동개혁’에 맞선 민주
노총 파업을 약화시키하려는 술책들
이다.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조직 보
존주의를 자극해 그 일부가 투쟁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이를 이용해 전
열을 흐트러뜨릴 속셈일 테다.

박근혜 정권은 흔히 그랬듯이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금지, 참가자
전원 검거, 복면 착용시 가중 구형 등

새정치연합의 뻔뻔함은 그 당의 계급적 본질에서 비롯

여야 간 기막힌 밀실 합의로, 박근
혜가 취임 후 여러 정치 위기 속에서
도 거듭 위기를 넘겨 온 비결 하나가
다시 드러났다. 바로 새정치연합의
구실이다.

12월 1일 민주노총 간부들을 만
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당대표 문
재인은 노동 개악 5법 반대가 당론
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원내대표가 이를 뒤집어
버렸다.

문재인은 12월 6일 국회 토론회
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개악은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다. 노동 개악
‘5법 반대’에서 말이 또 바뀐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도 국정원이 감청과 금융정보 뒤지
기를 손쉽게 하는 문제만 막으면 통
과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
주의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부패가
정쟁 차원에서 들춰질 것만 두려운
것이다.

이 당이 근본에서 (비주류일지라
도) 기업주들에 기반을 둔 당이기 때

후독한 탄압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
런 강경수가 뜻대로 관철된 것은 아
니다.

행정법원은 집회를 허용했고, 총궐
기 당일에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중
심으로 청소년들까지 5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해 도심을 행진했다. 이
들은 노동 개악 중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백남기 농민 패유 기원
과 살인 진압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
과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강경하게
탄압했음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
촉되지 않고 저항한 것이다.

사실 여당의 계산으로는,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표단을 불러 압박한 법안
상당수가 12월 2일 여야 원내대표 합
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
야 했다. 애초에 지역 예산과 연계해
이끌어낸 그 밀실 합의의 목적이 박
근혜 귀국 전에 개악 법안들을 처리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합의 목록 중 상대적
으로 부차적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
료사업지원법만이 통과됐고 나머지는
미처리 상태로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게 됐다.

최고 통치자의 통치스타일이 유신
스타일이라고 해서 유신 체제가 그리
쉽게 돌아오는 건 아니다. 지난 1년만
해도 비록 노동운동이 많은 투쟁에서
차질을 빚었지만, 그 과정에서 박근
혜 정권도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물론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에 박
근혜가 12월 ‘노동개혁’ 공세를 매우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지만, 결과가
예정돼 있지는 않다. 민주노총이 ‘노
동개혁’ 법안심사가 재개될 시 즉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총파업에 돌입
해 파업을 지속한다면 박근혜의 강경
수에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서평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수치에 관해 묻기도 따지기도
해야 하는 이유

★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 중인
서울 120다산콜센터 상담 노동자들'
‘진짜 사장’인 박원순 시장이 책임지고
노동자 전원을 공무원직 전환하라

빌려야 한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특정 쟁점
에서 일시적으로 (선거적 반사이익
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충돌할 수는
있지만, 노동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이익을 일관되게 편들 수는 없다.

그나마도 경제 · 안보 위기, 총
선 · 대선 주도권 다툼, 지배계급과
포퓰리즘적 기반 사이의 모순된 압
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분
에 휩싸여 있다.

새정치연합이 ‘노동개혁’을 막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11월 하순에 새정치연
합을 믿고 12월초 ‘노동개혁’ 저지
총파업 투쟁을 철회한 것은 실수다.
다른 악법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태도가 박근혜에게 강경수
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계기
중 하나인 듯하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새
정치연합이 개악을 막아 주리라고

바라는 것은 요행수를 앞세우는 것
이거나 투쟁 회피주의일 뿐이다.

노조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는 현
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데 방
해가 될 뿐이다. 대안과 확신 대신
불확실함과 의구심, 모호함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더는 새정치연합에
기대를 걸지 말고, 파업 투쟁 건설에
전력해야 한다.

경고! ‘노동개혁’ 합의 처리 위험

논의 재개 시 즉시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박설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당장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되지 못하고 약간 늦어진다고 해도, 곧바로 임시국회에서 개악안이 “합의 처리”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연일 새정치연합에 ‘여야 간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는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여당 지도부와 회동, 국무회의 등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근혜의 채찍질에 정부·여당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와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연내 개악안 관철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연내 처리

정부는 탄압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9일 오후 4시까지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에 위해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목을 조르고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요컨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연내 처리를 위해 극악하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를 저지해야 하



극악하게 몰아붙이는 박근혜에 맞서 실질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는 과제가 코앞에 닥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연거푸 피죄죄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얼마 전에 문재인은 민주노총 간부들을 만나 ‘노동개혁 저지가 당론’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바로 몇 시간 뒤에 원내대표 이종걸이 새누리당과 “합의 처리” 야합을 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새정치연합이 다시 “기간제법·파견법 반대가 당론”이라거나 “5개 노동법 반대”를 말한다 한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또다시

뒤통수 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전혀 없다.

이종걸은 야합에 반발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의 압박에 밀렸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정부·여당의 압박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릎 꿇는 정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난 3일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는 ‘노동개혁 후속조치 예산’이 예비비로 책정됐다. 노동법 개악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에 새정치연합도 동의할 해 준 것이다.

야당에 의존해서는 개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이 못 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차 삼차 촉구한다고 새정치연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

따라서 민주노총은 야당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

해야 한다. 실질적인 총파업으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때, 저들의 야합을 막을 수 있다.

10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는 ‘노동개혁을 위한 임시국회’로 불린다. 정부·여당은 개원 즉시 5개 노동법 개악안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개악안의 일부를 완화시키려는 시동을 할 수는 있어도, 합의 처리까지 약속한 마당에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해 개악에 협조할 수 있다.

따라서 저들의 야합을 막으려면,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 논의가 재개될 때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11월 30일 한중FTA 비준 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보듯, 여야가 합의한 뒤에는 반나절 만에도 개악안이 통과될 수 있다. 또 12월 3일 관광진흥법 통과 과정에서 보듯,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여야 합의 자체를 막지 못하면, 그 뒤에는 항의성 시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 논의가 시작되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해, 그것이 철회(위협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12월 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2월 16일 하루 파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하루 파업으로는 개악을 막을 수 없다. 법 개악안 처리와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한 현 상황은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 ‘저지’를 위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총파업으로 제 힘을 보여 줄 때, 저들의 개악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장호중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다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철도·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 절차를 피하려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지금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과 별도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등 꾀수를 통한 민영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철도와 의료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가 존재한다. 수백만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일터와 거리의 반대 정서와 운동은 법률 논쟁으로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협 등 보수적 법률 기관과 단체들도 법률에서 금지한 조치를 시행령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처럼 논란이 뜨거워진 탓에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런 상황을 뒤집으려는 박근혜의 강경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대상은 제조업·광공업·농수축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써먹을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본법은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이므로(헌법처럼) 각각의 법률이 금지한 조치를 시행할 근거가 된다. 법조계에서도 정부에 지나치게 재량권을 많이 주는 법이라 위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민영화와 복지지출 삭감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나머지 부처의 관료적 반발을 억누를 권한을 준다. 가끔 벌어지는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기재부가 찍어 누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처음 발의된 때부터 의료 민영화법, 공공서비스 민영화법으로 불렸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나 영리화를

추진한 분야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교육·통신·금융·관광·물류 등 다양하다. 세계경제 위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꺼리는 자본가들에게 새로운 이윤 획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반면 이런 민영화 조치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각종 공공요금과 의료비 폭등, 안전규제 완화로 인한 대형 사고 등뿐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에 의존하는 방식으로서는 결코 이를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미 여러 차례 양보 의사를 밝힌 새정치연합은 얼마 전 또 다른 의료 민영화법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통과시켜 줬다.

새정치연합의 배신 패턴은 이렇다. ‘법안 상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슬쩍 법안을 상정시킨다. ‘상정시킨 법을 야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일부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 너무 보잘것없어 있으나마나한 규제 조항을 넣는다. 그

리고는 전부 막지는 못했어도 대부분 막았다고 자화자찬한다.

이 지긋지긋한 새정치연합의 배신이 대중적 불신과 환멸을 사고 있는데도, 적잖은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새정치연합에 의존하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벌써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는 제외한다거나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 모호한 규제 조항을 끼워넣는 식으로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다. 박근혜가 이처럼 언제든 물러설 준비를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을 보며 눈 하나 깜짝 할 까닭이 있겠는가.

따라서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진영은 새정치연합을 추수하지 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가 독소임을 분명히 하고 국회 바깥에서 독립적인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시리아 전쟁의 성격과 반전운동의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중동에서 전쟁의 목소리가 더한층 커지고 있다. 영국 하원이 [12월 2일] 시리아 공습 개시를 결정한 직후, 독일 연방의회가 시리아 파병을 승인했다(전투 임무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말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모두에 특수부대를 증파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과 반제국주의자들은 반전운동을 최대한 광범하고 거대하게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제는 이전과 달리 복잡다단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03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은 없던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번에는 시리아에서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12월 2일 힐러리 벤[공습을 강하게 주장한 노동당 의원이 영국 하원에서 연설하며 되지도 않게 갔다 불인 스페인 내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스페인 내전은 파시스트와 반동적 세력이 한 편에 서고 진보적 부르주아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맞은 편에서 벌인, 비교적 단순한 구도의 투쟁이었다. 후자에 속한 스탈린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혁명가들을 분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조차도 시리아 내전에 비하면 이데올로기를 따른 분단선이 명확한 편이었다.

[반면] 시리아 내전은 대립의 양상이 복잡하고 온갖 갈등이 중첩돼 있다. 그 결과, 시리아 내 여러 세력들은 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은 갈수록 종단적·종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적·세계적 열강은 각자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며 시리아 내 세력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아랍 혁명으로 일어났던 세속적·민주적 물결은 명백한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주적

더구나 여러 서구 좌파들은 시리아 내전에서 저마다 다른 편을 지지한다. 일례로 [좌파 정당 리스펙트의 대표] 조지 겔러웨이는 바샤르 알아사드가 이끄는 바트당 정권을 진보적·세속적 세력으로 보며 공공연히 지지해 왔다. 시리아 정부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2003년에는 이 입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런 주장 때문에 반전운동이 분열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많은 좌파들은 터키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한테서 시리아 동부 유전의 원유를 사들인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런 좌파들은 이것이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나 아이시스의 핵심 후원자 중 하나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점을 놓치고

있다. 첫째, [시리아 동부 유전에서 나는] 원유가 시리아-터키 국경을 지나 수출된다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터키뿐 아니라 여러 많은 세력들이 아이시스와 교역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사드 정권이 아이시스한테서 원유를 구입하고 아이시스에 무기를 판매하고 기술자를 지원해 아이시스가 점령지에서 발전소를 가동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탐사 보도로 밝혔다.

둘째, 에르도안 정부가 시리아 내 여러 수니파 지하드 세력에 재정을 지원하고, 아이시스를 눈 감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쿠르드 민족주의 정당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시리아에서 점유 지역을 굳건히 해서 그 힘으로 터키 내 민족해방 투쟁을 강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에르도안 정부의 핵심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에르도안은 PKK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아이시스를 이용하려 한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외세들은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쟁취하고 있다. 에르도안을 만약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이시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살인마 아사드를 지키려고 시리아 폭격을 개시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반전운동이 열강의 각종 지정학적 계획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허울뿐인 주장과 거리를 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동맹인 영국에 사는] 우리의 과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내 군사 작전에 반대하고 우리 정부가 그 전쟁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해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광범한 입장으로 공습에 반대하는 시리아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나 심지어 아사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반전운동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영국 내 어떤 좌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반전 집회 대열에 함께한다는 점을 빌미로 전쟁저지연합에 참여하지 않아 왔다.

이는 아주 심각한 잘못이다. 시리아 내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행동해야 한다. 본지[<소셜리스트 위커>]는 시리아 혁명과 그 혁명이 애초 제기한 요구를 강력히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적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적에 맞서는 운동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483호
번역 김준호

격화하는 시리아·이라크 폭격

평화에는 관심 없는 제국주의 지배자들

김종환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 격퇴를 명분으로 한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시리아 개입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12월 2일 미국은 아이시스와의 전쟁을 위해 더 많은 특수부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라크·시리아에서 1만 회에 이르는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고 있고, 압도 다수는 직접 수행했다.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는 중동 전체에서 미군 “수만 명”이 이런저런 작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 정치권에서는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경제위기 때문에 군비를 줄이고 상당한 군 전력을 아시아에 집중하느라 중동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충분히 다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지배자들 중 일부는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밀집한 중동에서 미국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마치 파리 참사 때문에 아이시스와의 전쟁에 돌입한 것처럼 말한다. 지금은 항공모함까지 파견해 대폭 늘어난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시리아 등을 폭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11월 13일 파리 참사 전부터 이라크·시리아를 수백 차례 폭격했다. 시리아 연안으로 항공모함을 파견한다는 결정도 참사 전에 내려졌다. 또한 프랑스는 2월에도 항공모함을 파견해 이라크를 폭격한 바 있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연대’를 내세워 전쟁에 더한층 박차를 가했다.



ISIS 점령 도시에서 물을 받으러 줄을 선 시리아인들

영국은 이미 이라크에서 프랑스 못지 않게 폭격을 많이 하고 있었다. 12월 2일에는 폭격 지역을 시리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한 시간 만에 전투기가 발진한 것은 영국 지배자들이 얼마나 폭격을 고대해 왔는지 보여 준다.

독일도 파리 참사 전부터 이라크에 1백 명에 이르는 병력을 파병했고,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을 15퍼센트가량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파리 참사 뒤 독일은 시리아 연안에 정찰기 6대와 병력 1천2백 명을 급파하기로 했고 아프가니스탄 증파 계획도 확정했다. 또한 프랑스가 또 다른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아프리카 말리에도 6백5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러시아는 수십만 명을 살해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비호하고자 수년간 무기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9월 말부터는 직접 개입해 왔다.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시리아 내 세력을 모조리 ‘테러리스트’로 본다. 그래서 자국 해군 기지가 있는 시리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아이시스가 아닌 반군을 폭격하는 데 더 집중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서방을 향해 ‘시리아의 운명은 시리아인들이 결정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역겹다.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키는 데 이해관계가 맞는 이란에 6조 원에 이르는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강대국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테러 척결을 외치면서 군사 개입을 하지만, 시리아나 이라크 현지의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는 더 위험해지고 있다. 아이시스의 ‘수도’라고 불리는 시리아 도시 라카에서 활동하는 지하 단체이자 최근 국제언론자유상을 수상한 ‘라카는 조용히 학살당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이 모든 공습을 비난했다.

“무고한 민간인들은 공습으로 득볼 게 전혀 없다.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는 것을 중단하라.

“어쩔 수 없이 아이시스 치하에 살고 있다고 해서 라카 시민들이 모두 다 아이시스 편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살고 싶을 뿐이다.”

불행한 것은, 시리아의 궁극적 평화는 물론이고 테러 척결도 지배자들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적으로 지금 각국은 군사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심지어 많은 나라 정부들이 향후 국방 예산을 늘리려 한다. 만일 평화나 안전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그 돈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세계 각국의 빈곤을 퇴치하는 데 쓰여야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시리아는 전쟁 무대일 뿐이다

각국이 시리아에 개입하는 진정한 의도는 자국의 위세를 드러내고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1950~53년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중국의 개입이 한반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듯이 시리아 개입도 수단일 뿐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다.

영국의 한 보수 논객은 시리아 공습 의회 표결을 앞두고 “이번 표결은 영국의 국제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썼다. 2013년 영국 의회가 시리아 공습을 부결시키면서 미국과의 관계에 상처가 났

고,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줄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나 난민 문제 같은 유럽 현안에서 영국의 발언권이 축소됐는데 이것을 모두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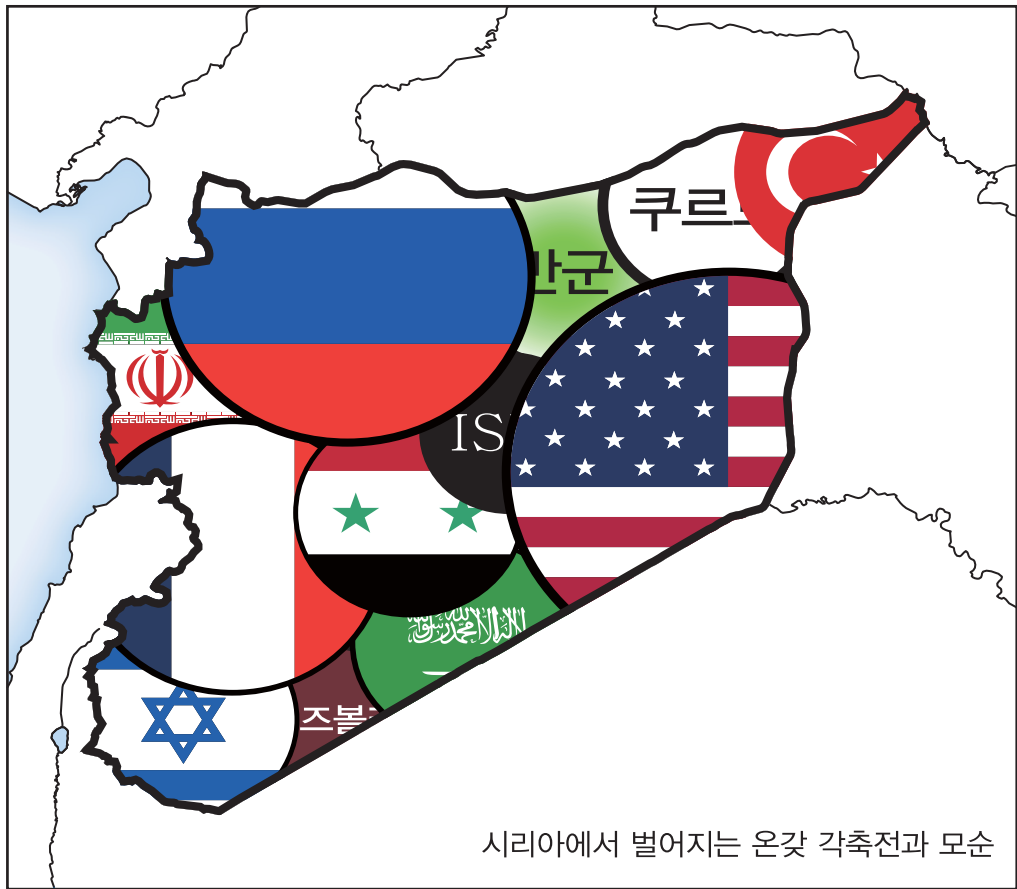
러시아의 목적도 중동의 오랜 동맹국(시리아)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서방의 개입이 더한층 커진 지금, 러시아는 그에 맞춰 개입 수준을 높임으로써 동맹국에 대한 자신의 ‘의리’를 더 과시하려 한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빈자리를 많이 느낀 중동 나라들에게 자신이 미국보다 더 일관되고 든든한 후원

자가 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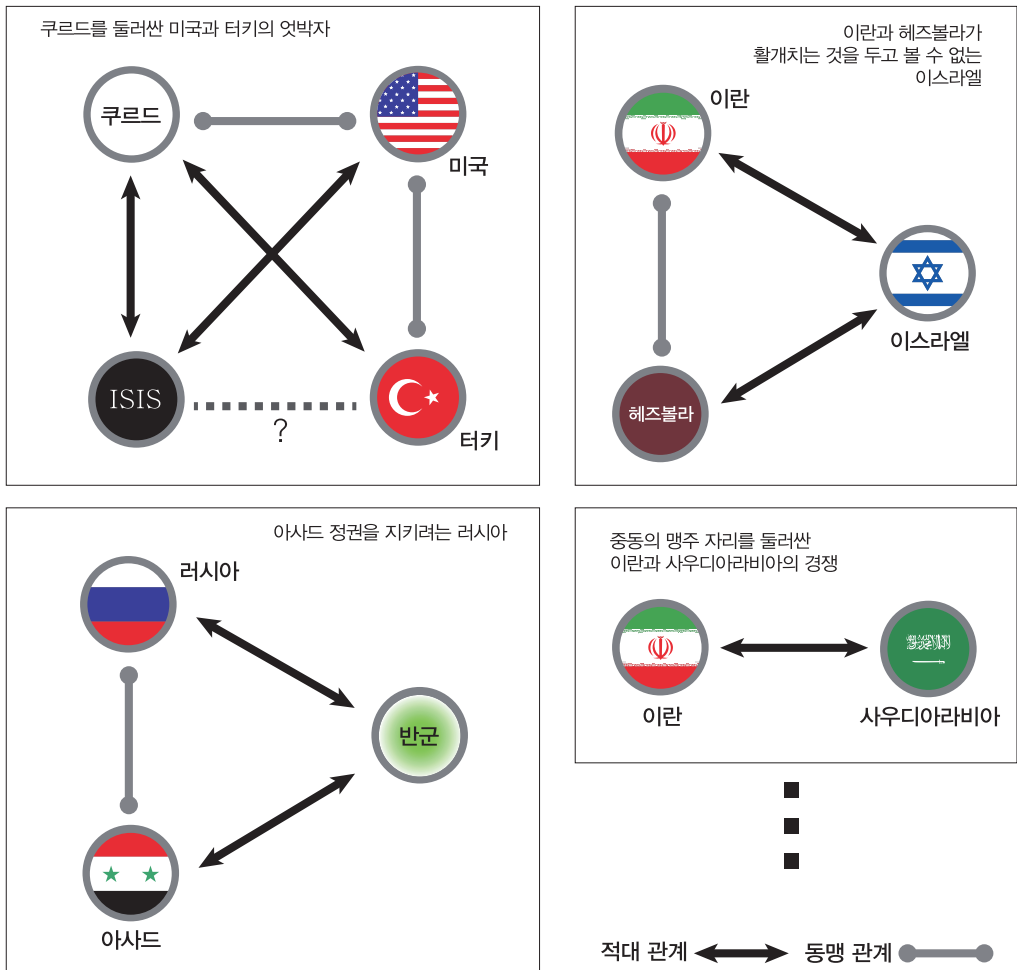
미국도 관심이 판 데 있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지배자들은 시리아 개입 문제에서 갈수록 러시아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9월 말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직접 개입했을 뿐 아니라, 파리 참사 이후 프랑스가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을 패권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미국은 10~11월

▶ 5면으로 이어짐



그레브 조종진



박근혜는 전쟁 지원 약속을 당장 파기하라

10월 박근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이시스,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미국이 아이시스 격퇴를 내걸고 결성한 국제동맹의 5개 실무그룹 가운데 하나인 ‘안정화 지원 실무그룹’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지난해 미국의 공습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을 더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정화 지원’이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 안정화 작전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파병 압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주간동아》)

미국이 중동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수록 한국도 함께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미국을 지원하면 할수록 아이시스뿐 아니라 각종 ‘테러’ 세력이 한국인을 겨냥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커진다.

테러 위협에 기름을 부으면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이다.

박근혜 정권은 전쟁 지원 약속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

▶ 4면에서 이어짐

에 유럽에서 나토 군사훈련을 2002년 이래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 몬테네그로를 나토로 끌어들이면서 러시아를 압박했다. 그런데 프랑스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의 공조를 중시하느라 자칫 이런 흐름에 엇박자를 낼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파리 참사 전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시작

된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래서 오바마 정권과 밀접한 싱크탱크는 파리 참사 직후 “올랑드에게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실에서 이것은 미국이 러시아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시리아·이라크 군사 개입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지배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이시스나 시리아·이라크 문제 자체보다는 다른 강대

국을 견제하거나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아이시스 격퇴와 상관없이 없는 일들, 예컨대 터키가 러시아가 아이시스가 아닌 반군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근 시리아 정권은 미국이 자신들의 군기지를 폭격했다고도 밝혔다.

이런 자들에게 아이시스 격퇴와 평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요구하는 것은 공상이다.

시리아 혁명가가 말한다

폭격은 죽음과 파괴의 악순환을 더 악화시킬 뿐

가야스 나이스
시리아 ‘혁명적좌파경향’ 소속 사회주의자(사진)

미국은 아이시스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구실로 이라크에 다시금 개입하고 시리아에도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연합은 수없이 많은 폭격을 했지만, 아이시스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동맹국들도 아이시스와의 전쟁을 구실로 시리아 군사 개입을 강화한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그랬고, 지금은 러시아가 그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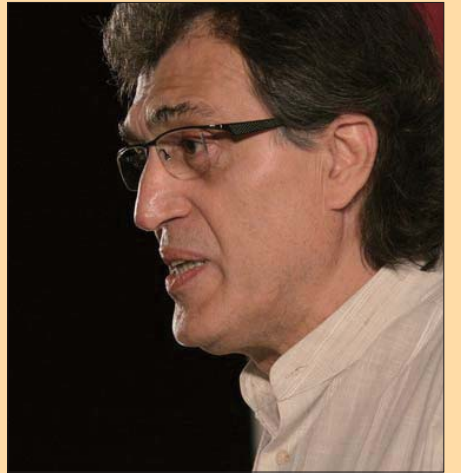
이란·헤즈볼라·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지키려고 한다. 대중 운동은 수세에 있고 반(反)혁명만 전진하고 있다.

중동 지역 강국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이시스를 핑계로 시리아에 개입하지만, 시리아인들을 위해서 개입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자신들의 이권과 세력권을 늘리고 싶어 한다.

영국 정부도 지분을 나눠 가지려 하는데 [12월 2일 영국 의회는 시리아 공습을 승인했고 불과 한 시간 만에 폭격을 시작했다], 그러면 시리아 도시와 마을이 더 많이 파괴되고 시리아인들이 더 많이 피 흘릴 것이다.

아이시스는 제국주의 개입과 중동 독재정권들의 잔학함이 만든 테러와 혁명의 패



배 속에서 탄생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라크에 개입하며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을 고문했다. 그 결과 아이시스가 부상했다.

[제국주의적] 개입은 살해와 파괴의 악순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시리아인들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지금 시리아인들이 원하는 것은 폭격—살해—죽음의 소용돌이를 멈추는 것이지 더 많은 폭탄과 군함과 미사일이 아니다.

시리아인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놔 두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시리아를 만들려면 말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481호 / 번역 김동욱

알고 보기

시리아는 어떤 나라였는가

바샤르 알아사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리아 대통령으로 집권해 왔다. 그의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집권했다.

시리아인의 다수는 수니파 무슬림이지만, 아사드 가문과 군부는 시아파의 한 분파인 알라위파가 통솔한다.

시리아는 레바논·터키·이라크·요르단·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에 따라 이 지역을 나눠 가졌다. 프랑스는 그 뒤부터 1945년까지 25년 동안 시리아를 통치했다.

시리아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1963년부터 2011년 아랍 혁명의 일부로 민주주의

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대중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48년 동안] 시리아는 계엄령 치하였다.

아사드는 시리아 혁명을 끔찍하게 탄압했다. 무력 충돌이 대중 반란을 압도했다. 이 무력 충돌에는 여러 무장단체가 끼어들었는데, 그중 몇몇은 서방이나 걸프 만(아라비아만 또는 페르시아만) 정권들이 지원한다.

이제 아이시스는 서방과 시아파에 맞선 수니파의 항쟁을 자처한다.

2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 전 시리아 인구는 2천3백만 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을 피해 시리아를 탈출한 사람이 4백만 명 이상이고 시리아 내 피난민은 8백만 명에 이른다.

미국은 이라크 점령 중 무슨 짓을 했는가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미국은 이라크 전역에서 저항에 맞닥뜨렸다.

남부 지역의 저항은 시아파 무슬림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이끄는 마흐디 민병대가 장악했다. 북부 지역에서는 수니파 무슬림 조직들이 미군과 전투를 치렀다.

하지만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라크에서 미국을 몰아낸다는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미국은 인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시아파 종교 지도자가 점령 하에서 실시된 2004년 선거를 지지하도록 이끌어냈고 마흐디 민병대는 전장에서 빠졌다. 동시에 남부 지역에 종파적인 시아파

국가를 세웠다.

이 때문에 북부 지역의 수니파 조직들이 전투를 도맡아야 했고, 그들은 처음에는 수니파인 알카에다의 성장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내 그 조직들도 알카에다에 반대하게 된다.

미국은 알카에다에 맞서 싸우면 ‘국민 통합’ 정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수니파 조직들에 약속했다. 하지만 알카에다를 격퇴한 뒤에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수니파는 이라크 정치에서 여전히 배제돼 있다.

제국주의가 종파 간 갈등에 책임이 있다. 폭격은 서방이 질러 놓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일 뿐이다.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김영익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아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종걸은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대테러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과거에 지금의 테러방지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적이 있으므로, 이종걸의 발언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정원

실제로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다(여기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함께 논의 중이다). 그 과정에서 독소 조항의 일부가 완화되거나 삭제됐다. 그러나 일부 조항을 고치거나 없애더라도, 테러방지법의 반민주적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우선, ‘테러’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규정한다.

구체적 테러 행위들을 열거해 ‘테러’ 규정의 모호함을 완화시키려 한 듯하지만, 그에 따르더라도 올해 초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같은 한 개인의 돌출적 행동도 ‘테러’로 볼 수 있다. 게다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같은 노동계급과 민중의 저항 행동도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폭넓게 규정된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정원 등이 언제든 ‘테러 위험 인물’을 지목해 조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돼 금융 정보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정보기관에 넘어가고 통신 감청도 받을 수 있다.

국정원의 권한이 더한층 강화되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대테러기구를 설치해 이를 통해 각 정부기관 내 테러대응기구에 개입할 수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될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사실상 국정원이 ‘컨트롤’ 할 공산이 크다.

테러방지법은 이주민과 난민도 겨냥한다. ‘테러 위험’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출입국을 규제하고, 사찰도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시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이 ‘테러 혐의’가 있다고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국내에서 정부의 상시적 감시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는 한시법으로 ‘G20경호특별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이 법은 지금의 테러방지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이슬람권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 5만여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중 99명에 대해 수시로 거주지와 직장을 확인하는 등 집중 감시했다. 이때 정부가 입국을 금지시킨 ‘테러 혐의 외국인’이 무려 5천여 명에 이르렀고, 그중엔 해외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있었다(참여연대, ‘테러와의 전쟁 10년,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벌어질 것이다.

G20

요컨대, 새누리당 안보다 다소 완화된 여야 합의안이 나온다 해도, 테러방지법은 이주민과 좌파의 활동을 겨냥할 것이고 민주적 권리를 제약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무고한 개인들이 억울하게 조사·처벌받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은 도저히 고쳐 쓸 수가 없고, 당장 폐기돼야 할 악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문제 등에서 일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합의 처리가 예정보다 지연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여야 합의안이 나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새정치연합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개혁’ 법안과 함께 테러방지법안도 적극 반대해야 한다.



파리 참사 이후 많은 이주민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우려한다. 11월 25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주민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서방의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였다

200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들은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왔다. 특히, 2001년 ‘9·11 공격’과 ‘테러와의 전쟁’은 각국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명분이 됐다.

그러나 2005년 7월 런던 폭탄 투척 사건과 최근 ‘파리 참사’에서 보듯이, 테러방지법은 전혀 ‘테러’를 막지 못했다. 각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으로 경찰력을 강화하고 국내 무슬림·이주민과 좌파 단체들을 공격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가 공격받고, 무슬림·이주민에 대한 차별도 심해졌다.

애국법

9·11 직후 미국 의회는 ‘애국법’을 통과시켰다. 그 덕분에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내·외국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 이 중에는 재판도 없이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 13년간 수감돼 있다 누명이 밝혀져 풀려난 사람도 있었다.

당사자가 모르게 FBI나 경찰이 가택을 수색할 수 있는 비밀수색영장도 남발됐다. 그런데 비밀수색영장이 발급된 사건 중에 ‘테러’ 혐의를 받은 것은 단지 1퍼센트에 불과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 오죽하면 NSA의 자국민 감시 능력이 “옛 동독의 보안경찰 슈타지조차 상상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평가마저 나왔다.

다른 서방 선진국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2002년에 시행된 독일의 테러방지법은 신분증에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난민담당부서 및 외국인 관청이 헌법보호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대폭 강화했다. 이런 조치가 인종차별을 부추긴 것은 당연하다.

독일의 테러방지법은 에너지·병원·철도·우체국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도 강화했고, 사측이 보안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줬다(로프 괴스너, 《민주법학》 제21호).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저항을 억누르려고 1970년대부터 대테러 관련 법률을 제정해 왔다. 그 결과 북아일랜드에 적용된 테러방지법은 북아일랜드 주민 전체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했다. 테러방지법은 억울한 희생자들을 낳았다.

1974~88년 북아일랜드에서 ‘테러 혐의’를 받은 사람들 중에 테러방지법으로 정식 기소되고 판결받은 사람은 1퍼센트에 불과했다(이계수, 《민주법학》 제21호). 즉, 테러와 무관하거나 가벼운 범법 행위를 저지른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테러방지법으로 체포되고 수사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북아일랜드에서 테러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원, 시민 평등권 옹호 활동가 등도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테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례 중에는, 영국 정부가 한 가족을 폭탄 테러리스트로 날조해 중형을 선고받게 한 ‘길포드 4인’ 같은 사건도 있었다(아버지의 이름으로’(1993)가 이 날조 사건을 다룬 영화다). 그럼에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영국 의회는 테러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 관련 법률을 수차례 통과시켰다.

파리 참사 후 프랑스에서도 프랑스판 ‘애국법’ 제정이 논의되는 등 각국에서 대테러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가 밀어붙이는 테러방지법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을까

새정치연합은 일부 ‘독소’ 조항을 없애거나 고치고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으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을 ‘상시 감독할’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것을 테러방지법 합의 처리의 조건으로 내세

운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싸한 법과 기구를 만들어도, 국회는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들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자신들의 활동을 얼마든지 국회 통제 바깥에 둘 수 있다.

미국 등 선진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

가에서조차 의회가 정보기관을 제대로 통제할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미국 의회는 NSA나 중앙정보국 CIA 등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미국 의회도 NSA가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하는 것이나 CIA가 ‘테러’ 혐의자를 고문하고 해외 곳곳에 비밀 감옥을 운영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아도 막지 않았다.

그나마 지금 논의되는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은 국회 정보위의 기존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견제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건 수소에게 젖을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강화되는 권한을 자신들을 향해 휘두르는 것만 우려할 뿐, 정부가 이주민과 좌파들을 옥죄고 탄압하는 것을 진지하게 ‘감시’하는 데는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 정당의 주된 기반이 결국 자본가 계급에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보기관들은 기뢰만 되면 휴대전화·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더 확보하려 한다.

정부가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

이원웅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외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제정하려 한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다른 대테러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에게 광범한 권한을 주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은 이미 시행중인 대통령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으로도 많은 권한을 누리고있다. 그러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만 적용되는 행정규칙이라면,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민간 통신망까지 아우르는 법률이다. 결국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정보통신망 전반에 대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한테 주는 법이다.

카카오톡 감청

국정원은 사이버테러 예방을 핑계로 '보안관계 시스템'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정보를 빨아들일 것이다.

보안관계 시스템은 해킹 등을 탐지·분석·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런데 보안관계 시스템은 특정인을 감시·추적하는 용도로 전환하기 매우 쉽다. 몇 가지 설정만 하면 특정인이 방문한 사이트 목록, 다운로드 받은 파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특정인과 연결된 IP와 그 IP와 연결되는 또 다른 IP를 추적하는 식으로 감시를 확대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보안'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보안관계 시스템을 국정원이 이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는 보안관계 시스템을 갖춘 보안관계센터가 구축돼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포털·메신저·주요 온라인 쇼핑

몰들도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를 이용해 엄청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스스로 해킹을 자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국정원에게 자기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렇게 알게 된 취약점을 이용해 사찰 대상의 카카오톡을 해킹하거나 감청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 국가안보국(NSA)이 그렇게 하고 있다. NSA는 11월 초에 자신들이 발견한 보안 취약점의 91퍼센트를 제조사나 관련 회사들에게 알려 준다고 밝힌 바 있다. 뒤집어 말하면 9퍼센트는 NSA 자신이 활용하려고 간직하고 있다는 말이다.

왜곡 전파

"사이버테러" 규정이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도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왜곡전파하는 등 모든 공격행위"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한다.

우선, 정보의 "왜곡 전파"를 테러로 규정한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온라인 상에서 정부나 기업에 대한 비판을 탄압하는 근거가 되기 쉬운 규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유행과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자 처벌"을 운운하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탄압해 왔다.

해킹 등의 공격도 모두 테러로 간주된다. 그러나 비약이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래 무수히 많은 해킹·보안사고가 벌어졌지만 그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는 없다.

물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해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해킹을 할 수 있는 자는 테러리스트 그룹이 아니라 바로 국가기관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P W 싱어는 《사이버보안과 사이버전》에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발전을 멈추거나 핵 원심분리기를 망가뜨리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수단은 단지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일단 침투한 다음에 무엇을 할지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손상을 일으키려면 설비 자체를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의 작동 방식과 공학, 근처에 있는 물리학을 말이다. 예컨대 스텝스넷*에는 사이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핵물리학자들, 지멘스 사에서 만든 특정한 종류의 장비를 잘 아는 엔지니어들이 관여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크고 작은 해킹 사건이 벌어지면 줄곧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적은 없다.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사건들을 테러에 비견하기도 힘들다.

이처럼 "사이버테러"는 디지털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단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온갖 사건을 사이버테러로 간주해 국정원이 개입할 통로를 만들고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기 위한 법이다.

※ 이 기사의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스텝스넷

이란 핵시설을 고장내려고 제작된 웜 바이러스. 이란에서 사용하는 원심분리기를 제어하는 특정 종류의 컴퓨터에서만 작동하게끔 설계돼 있었다. 나중에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간 파병 반대 촛불 참가자 항소심 무죄

검찰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방어하다

이종우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지난 8월 1심에 이어 12월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데서 거둔 작은 승리다.

검찰은 당시 연행자들을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위헌적 집시법을 근거로 무더기로 기소했었다. 그러다 집시법의 야간 시위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났는데도 검찰은 연행자 중 일부인 우리 4인을 표적 삼아 기소 내용을 변형하면서까지 공격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우리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동종범죄 전력 있고 경찰서에서 묵비하는 등 '정상이 불량'하다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4인은 우리에게 대한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민주적 권리 공격의 일환이라고 보고,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법정투쟁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4인 모두 직장 일이나 학업으로 바빴지만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건설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2009년 촛불문화제에 함께했던 단체들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과도 연대해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보적 법학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줬다. 노동자대회에서 변호사비 마련을 위한 모금도 받

았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모금해 줬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큰 힘을 얻었다.

1년간 진행됐던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집회 자유 침해를 입증하는 다양한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 검찰은 당시 촛불문화제를 진압했던 경찰을 12명이나 증인으로 신청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검찰 기소가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검찰은 우리가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일부 경찰들은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1심에서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뻔뻔하게도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우리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검찰과 정부의 비민주성을 폭로하고 제국주의 전쟁과 학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옹호했다.

검찰은 설득력 없는 꼬투리 잡기로 운동의 대의를 흠집내려 했지만 결국 패배했고, 재판부도 우리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투쟁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검찰의 비민주적 탄압에 대한 찢값을 물으려 국가배상청구소송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에 비유하며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 이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등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중요하다. 우리는 여기에 적극 함께할 것이다.



2009년 당시 아프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촛불 문화제 참가자.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유가 하락으로 커지는 불안정성

강동훈

2016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미국은 12월 15~16일에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한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돈 풀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이 불일치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럽과 미국이 상반된 통화정책을 펼치면 양쪽 모두 원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유럽으로서는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이 자금이 모두 미국과 달러 자산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물가 상승에, 미국은 자산 가격 안정에 실패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6월 이후 주식시장이 세 차례 폭락하고, 갑작스러운 위안화 평가절하까지 뒤흔들면서 중국 경제의 경각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잉 투자가 따른 수익성 저하로 제조업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중국 광공업 성장률(명목기준)이 지난해 5.1퍼센트에서 올 상반기 1.2퍼센트로 낮아졌다. 향후에도 중국 제조업 둔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성장을 둔화와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로 내년에도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 같다. 유가의 경우, 석유 수요가 둔화하는데도 중동 산유국들과 미국



2008~09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압력이 한국 기업들을 점점 더 궁지로 몰고 있다.

세일석유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해져 2016년에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세일석유 기업들이 채산성을 맞추려면 유가가 배럴당 50~70달러에 떨어야 한다고 한다. 올 들어 50달러를 밑돈 유가 때문에 미국 세일석유 시추기 수는 60퍼센트 감소하고, 미국 석유산업에서 2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 석유 생산량은 거의 둔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성장을 둔화와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로 내년에도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가격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 같다. 유가의 경우, 석유 수요가 둔화하는데도 중동 산유국들과 미국

네, 이는 올해보다 50만 배럴 정도밖에 줄지 않는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도 증산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월 4일에 열린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의에서도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유가가 다시 하락했다. OPEC이 감산하면 미국 세일석유업에서 2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 석유 생산량은 거의 둔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중대했기 때문이다. 세일석유 기업들이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으로 얼마나 버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2016년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하루 8백80만 배럴로 전망했

해보다 50만~60만 배럴 늘어난 것이다. OPEC의 현재 생산량(하루 3천1백50만 배럴)이 적정 수준보다 2백만 배럴가량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공급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정부는 전 세계 석유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 2020년까지 하루 석유 생산량을 올해의 두 배가량인 5백7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은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내년에는 미산량을 하루 3백30만 배럴로 늘리겠다고 12월 OPEC 회의에서 공언했다. 올

년 국면이 빈번히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전 세계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자원 수출국의 위기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 올해 초 이미 영향을 받았던 러시아·브라질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고 있고, 베네수엘라·콜롬비아·남아공 등의 위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자본이 대거 유입된 태국 등에서 자본 유출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취약한 국가에서 먼저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주변 국가로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야 한다.

트대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단기부양책으로 그나마 성장을 유지했지만 내년에도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서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엄격해지는 등 소비와 건설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2015년 3분기까지 우리 나라 가계대출은 1천1백66조 원으로 1년간 1백10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2016년에 시중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상승한다면 이자 부담이 12조 원(2014년 GDP 대비 약 0.8퍼센트) 증가하는 것이다. 2016년 성장률이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3.3퍼센트)된 반면, 수출 단가가 급락(-10.8퍼센트)하면서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수출 단가의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퍼센트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퍼센

트는 2009년 9.3퍼센트에서 지난해 14.8퍼센트로 빠르게 증가했다. 기업이자 부당이 커지면, 부실 채권 증대 등으로 금융권까지 위기에 빠지면서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2.1퍼센트에서 지난해 1.3퍼센트로 둔화했다. 특히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0.5퍼센트에서 2014년 -1.6퍼센트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61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처음이다.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전년 대비 0.7퍼센트 성장했던 제조업이 전례 없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표2] 참조)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올 연말부터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2008년 위기 이후 계속 위기 상태였던 해운·건설 부문뿐 아니라 중국 경기 침체로 위협이 커진 조선·철강·석유화학 부문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해운

해운업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유례없는 호황기를 누렸다. 중국의 고도성장 덕분에였다. 당시 중국은 연평균 10퍼센트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원유·석탄·철광석 등의 원자재를 엄청나게 수입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성장률은 6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최대 수요처였던 중국이 주축하는 데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량도 늘지 않아 해운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이런 추세

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공급 과잉이다.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사들은 지난 2000년대 중반 호황기 때 알다시피 발주를 나눴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선주사들이 발주한 선박들은 애물단지가 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선박 공급 과잉은 운임 하락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BDI지수(벌크선 운임지수)의 올해 평균은 732다. 지난해 평균은 1105였다. 호황기 시절 1만 1천 대를 넘어섰던 것을 감안하면 해운 행황이 얼마나 침체됐는지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해운 연합 악화로 국내 해운업체 1, 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다. 한진해운은 독자 경영을 하다 지난해 한진그룹에 다시 편입되면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다 지난해부터 겨우 흑자로 돌아섰지만, 부채가 많고 매출이 감소해 전망이 그리지 밝지 않다.

해운업체 2위 현대상선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내년 상반기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대상선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현대그룹은 '덜 빠진 독에 물 붓기'인 현대상선 지원을 포기한 듯하다. 현대증권 매각을 중단한 것을 보면, 현대상선을 포기하고 현대증권이라도 건지기로 한 것 같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을 둘러싼 갖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다. 현대상선을 한진그룹에 넘겨 한진해운과 합병하는 방안이 언론에 발표됐다가 두 회사의 부인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이 안을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현대차그룹이나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기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회사들도 여력이 없어 매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두 회사를 합병하거나 제3자에 팔지 않고 정부와 산업은행 지원을 통해 지금처럼 끌고 가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듯하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기대 생산설비에 과잉 투자했기 때문이다.

1992년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총 수출액 가운데 중국 비중은 29.8퍼센트 수준이었으나, 2000년 들어 43.6퍼센트로 급증했고 최근에는 50퍼센트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며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 자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조만간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중동의 석유화학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계속하며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북미에서도 셰일석유를 기반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종합화학, 한화계미칼, 롯데계미칼, SK종합화학, 여천NOC, 효성 등으로 구성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민간협의체'는 원료 공급 문제와 부산물·유류설비·저장시설 등 공역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모두 동상이몽인 상황이라 구조조정을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철강 업황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국이 2000년에 철강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서 철강의 과잉공급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철강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의 조강생산량(강철 생산량)은 8억 2천2백70만 톤으로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서중국의 철강 생산량 비중은 2001년 14.1퍼센트에서 2014년 55퍼센트까지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중국의 철강 수출도 급증했다. 2011년 4천9백40만 톤이었던 중국의 수출량은 2014년 9천3백80만 톤까지 늘어났다. 이 중 1천3백40만 톤이 한국으로 수출됐다(2014년 한국의 철강 생산량은 7천1백만 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성도 크게 떨어졌다. 2008년 17.2퍼센트에 달했던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4.94퍼센트까지 떨어졌고, 5조 원이 넘어섰던 연건 영업이익은 3조 원대까지 내려앉았다. 동부제철은 워크아웃과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동국제강은 분사 건물 매각에 나섰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이면서 최대한 버티는 전략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2017년까지 국내 계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해외 법인도 50개 줄여 1백17개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국의 중소 업체들이 먼저 쓰러질 길 기다리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산업정보 제공업체인 마이스틸(Mysteel)의 조사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 철강업체 중 이익을 내고 있는 비율은 13.5퍼센트에 불과했다.

마침 중국 정부는 얼마 전 '신(新) 철강정책'을 통해 2017년까지 철강 생산량 8천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전에도 중국 정부는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따라서 철강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과 경쟁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

올해 1~11월 전체 해외 건설 수주액은 3백9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백64억 달러)에 견줘 30퍼센트가량 줄었다. 특히 중동 지역 수주는 1백46억 달러로 지난해 견줘 절반도 채 안됐다.

이는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해외의 저가 수주로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해외 수주에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외 저가 수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유가로 중동의 석유파렛트 투자가 취소되고, 대금 지급도 미뤄지면서 자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조선조선 등에 쏟아부은 자금은 8조 3천 3천에 또다시 영업손실 1조 5천억 원을 내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유상증자 1조 2천억 원을 추진하고, 전 직원 1개월 무급 순환휴직 등을 하고 있지만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의 분할·합병 등의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한편, 건설회사들은 해외 수주 감소를 만회하려고 올해 국내 건설에 엄청난 힘을 쏟았다. 이 때문에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0~14년까지 연평균 분

양물량(27만 호)의 갑절에 가까운 49만 호에 달한다. 이처럼 공급 물량이 일시에 늘어나면서 2~3년 뒤 '물량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막대한 미분양 물량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KDI는 2018년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3만 채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건설회사들의 부채가 9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막대한 부채는 건설회사들뿐 아니라 금융권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계 건설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건설회사에는 중소 건설회사들뿐 아니라 GS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한라, 대림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같은 재벌 계열사들도 포함돼 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는 흥전을 앞둔 상황에서조차 구조조정 방침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지배자들 내의 이견 때문에 정부 주도의 합병·폐업 등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대대적인 합병과 같은 산업 구조조정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 동결·삭감,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원 감축 등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내년부터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3분기까지 조선산업의 누적 수주액은 1백9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나 줄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올 전체 수주액 역시 지난해보다 27퍼센트 감소한 2백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빅3'로 불리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영업손실은 올해 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업황 부진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이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대선조선 등에 쏟아부은 자금은 8조 3천억 원이 넘는다. 특히 STX조선은 4조 원 넘는 돈이 투입됐지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성동조선해양 등 나머지 중소형 조선업체들도 중국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빅3'뿐 아니라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대선조선 등 중소 조선사까지 포함해 조선산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려고 하는 듯하다. 중소행사를 대형회사에 넘기거나 중소행사 간 통합을 추진하는 식으로 말이다.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을 삼성중공업에 넘기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채권은행과 조선회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조만간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에 4천5백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듯하다. 법정부리로 가면 채권 은행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되면 STX조선해양을 대우조선해양과 합병한다는 정부 계획은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맺으며

2008~09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압력이 한국 기업들을 점점 더 궁지에 몰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유가 하락 등은 한국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이 대중국 수출이나 석유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흥전을 앞둔 상황에서조차 구조조정 방침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지배자들 내의 이견 때문에 정부 주도의 합병·폐업 등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대대적인 합병과 같은 산업 구조조정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 동결·삭감, 희망퇴직 등을 통한 인원 감축 등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내년부터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수출 감소로 위험에 빠진 한국 경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7퍼센트로 예상된다(한국은행). 이는 2014년 3.3퍼센트 성장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올해 3퍼센트대 성장을 기대해 온 정부의 예상에 못 미치는 수치다.([표1] 참조)

올해 2.7퍼센트 성장조차 3분기에 전기 대비 1.2퍼센트(분기별 성장률로는 2010년 2분기 1.7퍼센트 이후 5년 3개월 만의 최고치)나 성장한 덕분에다. 게다가 3분기 성장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건설업 등 부동산 부문이었다. 계속된 저금리 정책과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 것이다. 3분기 성장률(1.3퍼센트포인트로, 성장률의 절반이나 차지했다. 한편 3분기에 민간 소비도 증대했는데, 이것도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 확대 정책 때문이다.

반면 3분기 수출은 -0.8퍼센트포인트로 성장률을 깎아먹었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이 부진했을 뿐 아니라 경기가 살아난다는 미국으로의 수출도 별로 늘지 않았다. 최근 미국의 소비 증가가 의료·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주로

[표1] 경제 성장률 추이(단위: 퍼센트)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계	5.4	4.2	3.4	3.3	3.4	3.1	3.6
한국	6.5	3.7	2.3	2.9	3.3	2.7	3.2

(자료: IMF, 한국은행, 2015년과 2016년은 예상치)

[표2] 한국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단위: 퍼센트)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증가율	15.3	12.2	5.1	2.1	1.3
영업이익률	5.3	4.5	4.1	4.1	4.0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18.5	13.6	4.2	0.5	-1.6

(자료: 한국은행, 2014년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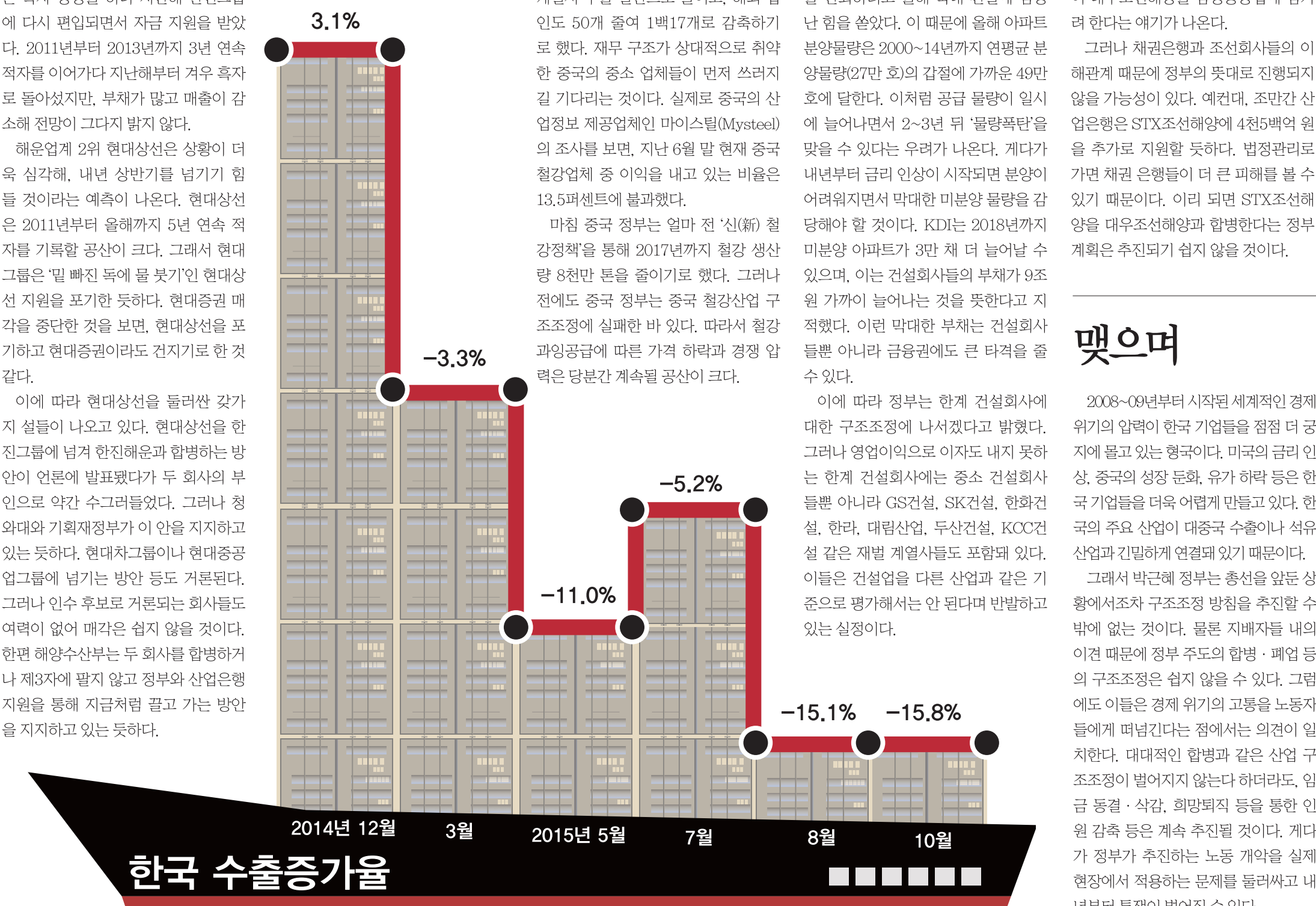
확대되는 반면, TV·가전·자동차 등 공산품 부문의 소비는 증가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5년 수출은 전년 대비 7.1퍼센트 감소한 5천3백20억 달러, 수입은 16.3퍼센트 감소한 4천4백억 달러로 예상된다(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전체 수출의 25퍼센트)이 10월까지 4.3퍼센트 줄었고,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9백20억 달러 흑자로 2014년의 갑절로 늘어날 듯하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전형

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할 수 있다.

수출 감소의 주 원인은 석유·화학·철강 제품 등의 수출 단가 하락 때문이다(수출 단가의 하락은 석유·석탄·가스 등의 에너지·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이다). 수출 물량 증가는 둔화(3.3퍼센트)된 반면, 수출 단가가 급락(-10.8퍼센트)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이다. 수출 단가의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퍼센트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퍼센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다른 불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12월 15~16일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취약한 세계경제에 불안정을 더하고 있다 미국 연준 의장 제트 앨런.

이장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오는 12월 15~16일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2006년 이래 처음 인상이다. 이런 상황은 2007~08년의 세계경제 위기가 얼마나 깊었고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미국 경제는 노동시장이나 인플레이 등에서 약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경제가 금리 인상이 초래할 후폭풍을 견딜 수 있을지는 논쟁거리다.

먼저 미국 경제를 살펴보자. 실업률은 경제 위기가 절정일 때의 10퍼센트대에서 5퍼센트대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일 뿐이다. 인플레이도 연준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는 제로에 가깝고, 근원물가지수(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1.9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 경제의 실질GDP 성장률도 2.2퍼센트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치인 3.3퍼센트를 밑돌고 있다. 달리 말해, 미국 경제는 영속적이고 장기적인 저성장을 겪고 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케인스주의자들은 양적완화 정책과 더불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적완화 유지나 적자 재정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자본 투자를 늘려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지는 않다.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정부 지출이 확대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주된 요인은 투자인데, 이것은 이윤율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1~2를 보면, 미국과 전 세계의 자본 이윤율이 정체돼 있어 경제가 회복다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월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은 “2018년까지 G20 회원국 전체 성장률을 추가로 2퍼센트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세계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하락해 왔고, 그 때문에 세계경제와 주요국 경제의 성장률 예상치도 낮아지고 있다. OECD의 수석경제학자 캐서린 만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한 국제무역이 계속 정체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2014년 말부터는 더 추락하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견실한 무역은 세계경제 성장과 동반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2015년 3분기부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2015년 2분기 기업 투자가 지난 2년의 평균치인 4.1퍼센트보다 더 낮은 2.1퍼센트를 기록했고, 신규 공장에 대한 투자는 전분기 대비 4퍼센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유로존 경제도 디플레이 위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이 추가로 양적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 경제도 경착륙 위기감 때문에 6~8월에 주식시장 쇼크가 나타났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신흥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일본 경제도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베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업 투자가 매우 위축돼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또 다른 불황을 초래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축매

그동안 전 세계 주요 국가들(미국, 유로존, 중국, 일본 등)이 양적완화를 통해 값싼 통화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채권 시장은 호황이었다. 또 다른 결과는 아시아, 남미, 유럽의 기업들이 낮은 금리의 자금을 활용해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그 덕분에 중국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신흥국 기업들은 부채가 그 국가의 GDP에 버금갈 정도로 높아졌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달러 표시 채권은 10조 달러에 달하고, 그중 신흥국 경제로 유입된 자금은 3조 달러가 넘는다. 이는 2009년에 견줘 갑절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구조 조정에 직면해 있고, 가계부채도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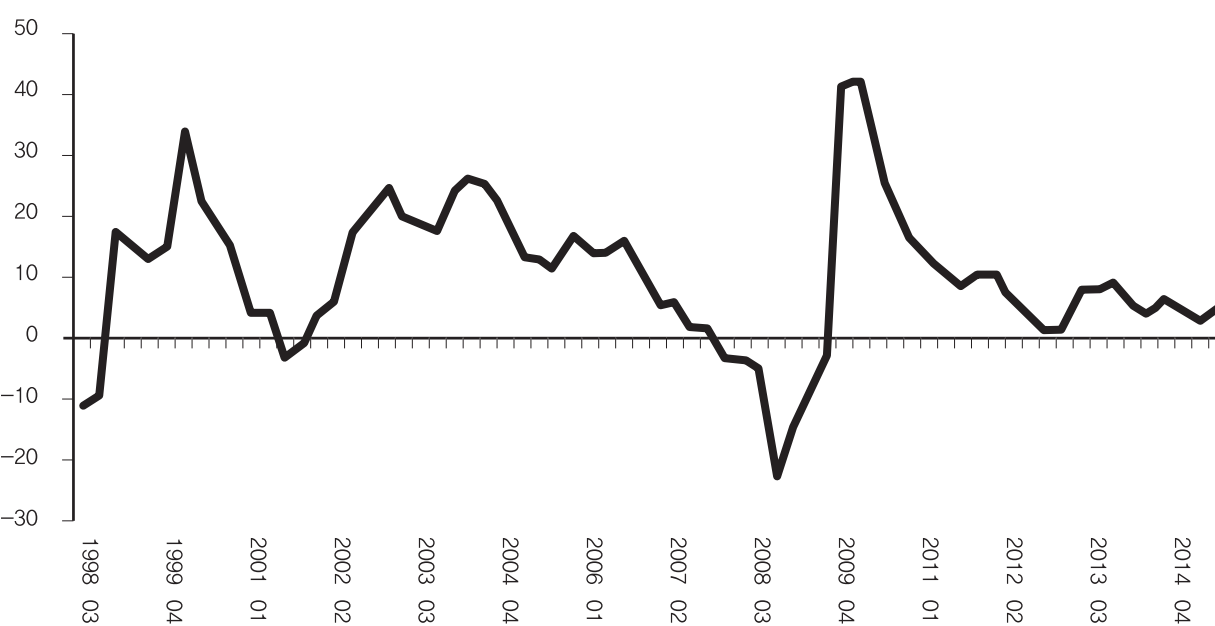
감가상각 이후 미국의 기업 이윤율(%)

출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전 세계 기업 이윤율(%)

출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최대치로 증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값싼 돈으로 위기를 가리는 일을 더는 지속하기 힘들어 보인다. 전 세계 경기 회복의 기반이 됐던 원자재 호황이 붕괴하면서 그 연쇄적 파장이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러시아·베네수엘라 같은 산유국과 수출에 의존하는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흥국 경제 상황은 더 열악하다. 수출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은 낮아지고, 금리 인상 기대

로 말미암은 달러화 인출로 신흥국 통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달러 표시 부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더 증대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 때문에 국제결제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3년 벤 버냉키 연준 전 의장이 긴축을 예고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긴축 발작’ 때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더욱이 유럽과 일본은 양적완화 정책

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가치를 더 높여 국제 금융 질서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릴 수 있다.

물론 국가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경제가 계속 추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로존과 일본,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중국, 석유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침체에 빠진 산유국과 자원 수출국, 교역 둔화로 말미암은 수출국들의 위기, 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은 신흥국 위기 등은 또 다른 불황을 예상하게 한다.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장호중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12월 8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을 포함한 보건 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멀리 부산대병원에서도 조합원 1백여 명이 상경했다.

“우리는 오늘 해고를 쉽게 하고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동 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를 강요하고, 원자력의학원을 매각하거나 병원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가짜 정상화를 막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유지현 보건 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해 “온콜(상시) 파업 대기 상태에 돌입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는 12월 내내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고 호소했다.

“10일 이후에도 [정부여당은] 임시 국회에서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정신 못 차린 야당들이 여기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남대병원 지부와 원자력의학원 지부는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는데, 두 지부장들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투쟁 결의를 밝혔다.

“오늘 임기 8일차인데, 파업을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내내 공공기



“수익의 논리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진짜 정상화가 아닙니다” 12월 8일 국회 앞에 모인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관 가짜 정상화 정책에 맞서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올해 내내 병원 측이 ‘국가 정책이다’, ‘교육부 지침이다’ 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하계휴가, 연가보상비 등이 삭감됐고 최근에는 우리가 과반노조인데도 동의를 얻지 않고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정부와, 정부 압박에 아무 소신없이 따르는 병원에 맞서 단결된 힘을 보여 주기 위해 어제 파업 전야제를 하고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하루 경고파업이지만

14년 만에 하는 파업입니다. 이번에는 말로 가짜 정상화 정책에 맞선 싸움을 해야 합니다.”

착한 적자

원자력의학원 지부는 이날 국회 앞 집회 전에 미래부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유일의 방사능 관련 국가재난비상대응기관이며 국가 암 관리 전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은커녕 공공기관 구조조정

이라는 미명 아래 낙하산 인사를 보내 매각, 위탁경영, 용역화 등을 논의하려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임금 삭감·동결·반납을 반복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은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착한 적자, 공익적 적자도 사실 ‘경영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자본의 논리로, 수익의 논리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경영 정상화가 아닙니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부는 오히려 일 년 짜리 원장을 선임해 매각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팔기 좋게 만들겠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별의 힘으로 꼭 막아낼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이어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16일 파업 투쟁에 적극 참가할 것을 결의하며 집회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맞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김낙규 전국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

11월 27일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자 5명이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탄압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전국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임금·단체교섭을 해 왔다. 지난해는 1백51곳, 올해는 1백42곳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단협에 참가하지 않은 한 업체가 지난해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1차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항고를 하자 검찰은 이전 결과를 뒤집고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을 기피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업체에 항의했을 뿐인데, ‘폭력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건설 노동자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 공갈 협박으로 둔갑한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검찰이 구속 사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주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다. 건설 노동자들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가장 선두에 서서 노동 개악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들

의 외침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살인 진압을 자행했다. 결국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되레 노동자들을 비난하며 탄압에 나섰다.

민중총궐기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에 앞장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11월 21일 민주노총 사무실과 함께 전국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며칠 전에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지역 조직 사무실 4곳도 압수수색했다. 그 와중에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을 구속하고, 전국의 타워크레인 지부장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우리를 위축시키려 한다.

이번 타워크레인분과에 대한 공격은 2003년에 토목건축부문 노동자들에게 자행된 탄압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거

듭된 탄압으로 구속자가 계속 늘어났고, 토목건축부문의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조직을 복구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타워크레인분과는 현재 건설노조 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차원의 협상을 성사시켜 왔다. 정부와 건설사들은 이번 탄압으로 가장 잘 조직된 타워크레인 조직을 약화시켜 전체 건설 노동자들을 위협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탄압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이미 전국의 지방검찰청 앞에서 탄압에 항의하는 일인시위를 시작했고, 12월 13일 전국 조합원 상경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은 지부별로 긴급 총회를 치르며 “전국의 조합원 2천4백 명이 모두 구속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동지들을 석방할 때까지 전국의 건설 노동자들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프랑스 지방선거 결과

파시스트에 맞선 급진적이고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데이브 수엘

12월 6일 일요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FN)이 1위를 하며 다른 정당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는 '레지옹' 13곳의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 국민전선은 레지옹 13곳 모두에서 결선에 진출했다. 그중 6곳에서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 결과] 한 곳에서만 승리 하더라도 국민전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을 차지하게 된다.

북부 지역에서 출마한 국민전선의 대표 마린 르펜은 경쟁 후보들의 득표를 모두 합친 표만큼을 득표하며 1위를 차지했다. 남동부 지역에서 출마한 마린 르펜의 조카 마리오 마레샬 르펜도 비슷한 성적을 거두며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투표율은 50퍼센트였는데, 국민전선은 27.7퍼센트를 득표했다. 즉, 전체 유권자의 7분의 1이 파시스트에 투표한 것이다.

국민전선은 심지어 파리에서도 9.7퍼센트를 득표하며 그동안 좀처럼 뚫지 못했던 도시 지역 선거구로 진출하는 침투로를 마련했다. 지난해 선거에서 국민전선이 시장을 차지하는 등 [시장은 시의원들의 간선제로 선출되므로 시장을 차지했다는 것은 시의원 다수를 차지했다는 뜻] 강세를 보인 지역에서는 지지가 더 견고해졌다.

연단

프랑스에서 레지옹 정부는 권력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국민전선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한다.

마레샬 르펜은 [도지사로 당선하면] 자기 지역에서 가족계획상담소와 성소수자 단체들에 주는 지원금을 끊으려 한다.

마린 르펜은 [도지사로 당선하면] 칼레에서 이민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 수송경찰 조직을 자신의 직속 기관으로 창설할 것이다. 마린 르펜은 학교 급식



마린 르펜 극우를 격퇴하려 우파를 지지하자는 전략은 실패했다.

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메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들을 위한 메뉴]를 없애겠다고 시사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국민전선이 자기 사상을 퍼뜨릴 연단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전선은 강경 파시스트인 핵심 활동가들이 대중적 운동을 일으키며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얻었다.

선거운동을 벌이며 마린 르펜은 “비유럽적 질병”에 걸린 난민들이 퍼뜨리는 “세균 같은 이민을 근절”하자고 주장했다. 마레샬 르펜은 “그리스도교 문화”의 나라에서 무슬림이 가톨릭 신자와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전선이 부추기는 인종차별은 2017년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국민전선의 동맹자인 베지에 시장 로버트 메나르드는 전국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이용해, ‘질서 유지’를 위한 지역 자경단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주류 정치인들의 무슬림 박해는 파시스트들의 주장이 그다지 극단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도록 만들었고, 그 덕분에 파시스트들은 바로 그 주류 정치인들에 대해 널리 퍼진 반감을 파고들 수 있었다.

막다른 전략

이제 주류 정당들은 12월 13일 결선 투표에서 국민전선이 승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허둥지둥 손을 잡고 있다. 그런데 비교적 좌파적인 정당이

비교적 우파적인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 크다.

집권당인 사회당은 우파 연합인 공화당이 국민전선에 이어 2위로 결선 투표로 진출한 레지옹에서 자신들의 후보를 사퇴시켰다. [레지옹 선거에서는 1차 투표 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5퍼센트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이 모두 결선 투표를 치른다.]

다시 말해, 사회당은 파시스트에 맞선 투쟁을 전 대통령인 우파 니콜라 사르코지의 공화당 손에 맡겨 버린 것이다.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4천 명(대부분 무슬림)이 ‘극단주의자’로 의심된다며 포로 수용소에 수감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정당에 말이다.

그러나 공화당을 ‘동맹’이라 생각한 사회당에게는 분노스럽게도, 사르코

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회당을 위해 자신들의 후보를 사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고히 했다.

좌파 정당인 녹색당과 좌파전선은 몇몇 레지옹에서 사회당과 연합해 출마했다. [그러나] 사회당은 시위를 금지해 좌파들이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행진을 벌이려 하면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

파리를 둘러싼 레지옹인 일드프랑스에서 공산당은 사회당과 공조한다며 “공산주의자들을 뿌리 뽑자”고 말했던 사회당 후보를 지지했다.

그리고 [사회당 소속의] 총리 마누엘 발스는 2017년 대선 때 국민전선에 대항하는 모든 민주적 정당들의 “연합” 후보를 세우려 애쓰고 있다.

극우를 격퇴하기 위해 우파를 지지하자는 것은 막다른 길로 가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마린 르펜의 아버지 장 마린 르펜이 2002년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했을 때 이미 사용된 전략이다. 당시 혁명적 좌파들조차 우파 정당의 후보 자크 시라크에게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부패하고 사악하고 인종차별적인 정치인의 기를 살려줬을 뿐이고, 국민전선을 격퇴할 수 있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는 별 쓸모가 없었다.

프랑스 노동계급은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프랑스 노동계급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노동계급의 힘을 억누르는 데 이용되는 탄압과 무슬림 혐오에 맞선 전투가 필요하다.

규모가 상당하고 단결된 투쟁으로 파시스트에 맞서지 않고서는 국민전선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전선에게 길을 열어 준 인종차별적 정치인을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파시스트의 위협은 오히려 급진적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83호 / 번역 차승일

아르헨티나 대선 우파 승리, 브라질 노동자당PT 정부의 정치 위기

라틴아메리카가 우경화하고 있는가?

김준호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우파 선거연합이 승리한 것[14면을 보시오]과 페론주의의 위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은 신자유주의 우파 후보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11월 22일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관련 기사: 본지 161호 ‘아르헨티나 대선 — 페론주의의 위기와 양극화 속에서 노동운동과 혁명적 좌파가 성장하다’] 라틴아메리카에 우경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 잇달아 등장한 라틴아

메리카 ‘좌파 정부’의 첫 주자였던 브라질 노동자당PT 정부가 심각한 정치 위기에 처한 것도 이런 인상을 부채질한다. 2014년 힘겹게 재선한 [관련 기사: 본지 137호 ‘브라질 대선 —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힘겹게 재선한 노동자당(PT)’] 대통령 지우마 호우세피의 노동자당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13퍼센트를 차지하는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연루된 대규모 부패 추문에 시달리고 있다. 호우세피 탄핵을 요구하며 우파들이 주도한 수십만 명 규모의 반부패

시위가 올해에만 두 차례나 벌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관찰을 끝내면 전체 그림을 읽기 어렵다.

이 나라들은 모두 세계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각국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고강도 긴축을 시작했고, 이에 맞선 투쟁도 두 나라 모두에서 성장했다.

노동자 투쟁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임 정부의 긴축에 맞서 십수 년 만에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성장했다. 여러 차례 하루

전면 파업이 벌어졌고, 노동자 투쟁뿐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같이 성장했다. 우파들뿐 아니라 트로츠키주의 급진 좌파들의 선거 연합도 선거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1백만 표를 얻어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여성에 대한 구타를 종식시키고자 수십만 명이 참가한 대중 시위 “단 한 명도 안 돼!”(스페인어 약칭으로 NUM)가 벌어져 스페인어권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됐다.

브라질의 노동자당 정부 또한, (정당 이름과 달리) 전임 대통령 톨라 이래로 신자유주의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노동자들을 공격한 것 때문에 분노를 사 왔다. 호우세피 정부 들어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복지를 삭감한 것 때문에 브라질 노동자와 청년들은 2013년 6월 긴축 반대 1백만 거리 시위를 벌였고(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였다), 월드컵이 열린 2014년 여름에도 긴축 반대 대규모 거리 항쟁을 이어갔다. 노동자당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브라질 노동조합총연맹CUT도 2013년 7월에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이며 운동에 동참했다.

브라질 노동자들의 투쟁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올해 3월 호우세피 정부

왜 프랑스는 아이시스의 표적이 됐는가

자드 크라스니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11월에 끔찍한 파리 공격을 자행한 사람들이 모두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공격을 프랑스 사회와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방 세계 전역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 역겹고 무슬림 혐오로 뒤범벅이 된 반발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반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의 무슬림들이 당한 정치적·사회경제적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다.

‘라이시테’(거칠게 번역해 ‘세속주의’라고도 불린다)에 헌신한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국가는 인종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자료를 발표하거나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무슬림의 압도 다수는 아프리카(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뿐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아랍 나라들까지 포함하는) 출신자들인데, 그들은 곳곳에서 차별을 당한다. 무슬림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국민 평균의 세 곱절이나 되고, 연간 소득도 국민 평균보다 30퍼센트 낮다.

게다가 무슬림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8퍼센트를 차지하지만, 수감자 중에서는 50~7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사회경제적 요소에는 지리적 분리도 포함된다. 프랑스 무슬림의 다수는 (출신 배경이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선구역”(ZUS)이라고 불리는 대도시 변두리에 거주한다.

이 지역들은 주민 중 이민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실업률이 높고, 공공 임대 주택 거주 주민 비중이 높고, 빈곤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5년 11월 청년들이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소요가 일어난 지역은 모두 ‘우선구역’으로 분류되는 곳이었다.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이 발



무슬림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차별을 보면 파리 참사의 배경이 이해된다. 파리 한 모스크 앞에서 순찰하는 무장 군인.

표한 보고서를 보면, 그 소요에 참가한 청년들은 “인종적·지리적 배경도 비슷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 사회로부터 배제당한다는 정서를 공유했다.”

이런 물질적 배경에 더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프랑스 국가와 우파의 이데올로기적 공격도 있었다. 2004년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전통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일명 ‘히잡 착용 금지법’]이 ‘라이시테’의 이름으로 제정된 일, 2007년 우파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이민·국가정체성·통합부”를 설치한 일 등 정치인과 대중매체가 저지르는 수많은 “일상적 인종차별”은 “결국 무슬림이 문제다”라는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려는 시도들이다.

정치인들과 대중매체는 이민을 ‘통합’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슬람에는 본래부터 무슬림들이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이른바 ‘공화주의적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관점은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는 데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보

통 사람들 사이에 상호 적대감을 일으키고, 잘 만들어진 문화적 연막 뒤에 있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가린다.

좌파와 무슬림

불행히도 프랑스 좌파들은 이 함정에 자주 빠진다. 프랑스 좌파 대다수가 히잡은 여성차별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며 ‘히잡 착용 금지법’을 찬성했다. 그 좌파들은 그 법 자체가 특정 여성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억압적 법이라는 사실을 무시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혁명적 좌파 조직들 사이에서는 이슬람 전통 복장을 한 여성을 당원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난다. ‘라이시테’의 이름을 앞세운 이런 태도는, 거만하고 잘난 권력자가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해를 당사자들보다 더 잘 알아서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히잡 착용 금지법’뿐 아니라, 지난날의 식민지 건설과 최근의 제국주의적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쓰여 왔다.

‘라이시테’가 흔히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가치를 표방한다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라이시테’는 프랑스 혁명 때 부르주아지가 절대왕정과 가톨릭 교회에 맞서 싸울 때 사용한 강력한 무기였다. 지배적 종교에 맞서는 투쟁은 절대주의적 봉건 질서를 타도하는 데서 필수적 요소였던 것이다.

19세기 말 ‘라이시테’는, 이제는 승자가 된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력(특히 공교육에서의 지배력)을 떠받치는 주춧돌이 됐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교의로 쓰인다.

‘라이시테’와 마찬가지로 종교 사상과 실천을 이해할 때는 항상 그것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프랑스의 젊은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는 것은 반항이자 해방의 의미인 경우가 흔하다.

앞에서 개략적으로 말한 맥락에서 많은 프랑스 무슬림들이 사회의 나머지로부터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물질

적으로 곤궁하고, 배제된 “빈민가”에 살고,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의 십자포화를 맞는다. 게다가 프랑스 좌파는 [이 문제에서] 마비돼 있다. 그래서 프랑스 무슬림들은 정치 투쟁이라는 숨 쉴 공간이 작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는 알제리를 식민지로 지배한 끔찍한 역사가 있고, 국제적으로는 서방 세계 전역에서 무슬림 혐오가 성장하고 있고, 무슬림이 많이 사는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진다.

이슬람 문헌이나 실천에 내장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프랑스 국내외의 맥락을 볼 때만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일부 무슬림 청년들이 왜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아이시스)에 이끌리고 자기 나라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파리 공격 이후 지배자들이 벌이는 캠페인에 맞선 저항이 자란다는 징후가 있다. 프랑스의 주요 극좌파 조직인 반자본주의신당(NPA)은 지배계급이 호소한 ‘국가적 단결’을 거부했고, “이른바 공화주의적 가치의 이름으로 국가가 저지르는 인종차별”을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파리 공격 이후 [프랑스 경찰은 집회를 금지했지만 이를 거슬러] 파리에서는 수백 명이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난민들을 환영하는 시위를 벌였다. 마르세유에서는 수천 명이 무슬림 혐오와 전쟁책동에 반대해 거리를 행진했다.

프랑스 국가의 군사적 대응은 모두 아이시스가 생겨난 단기적·장기적 조건을 재생산하기만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체계적 차별과 무슬림 혐오가 증가하는 것은 많은 프랑스인들의 주변화를 촉진하기만 할 것이다.

이런 모골이 송연한 전망에 맞선 유일한 희망은 대담한 좌파가 프랑스 지배계급이 자행하는 차별에 맞선 투쟁의 단결을 이를 이데올로기와 실천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리뷰> 2015년 11월호 / 번역 차승일

가 해고와 외주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CUT는 4월 15일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이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8~9월에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11월에는 페트르브라스 노동자들이 총력 파업을 벌이며 격렬하게 투쟁했다.

요컨대, 두 나라 모두 우파들이 일방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이용해 모든 계급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한 개혁주의 정치가 경제 위기로 위기에 빠진 것이다. 그 와중에 우파가 선거적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계급투쟁 자체가 위축된 것은 아니었다.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특히 막 선거를 치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는 선거 결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가 조금 꺾일 수도 있다. 타협의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긴축과 그에 맞선 노동자·서민의 분노라는 큰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므로, 투쟁이 다시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에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을 제시할 급진 좌파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2014년 4월 10일 아르헨티나를 강타한 반긴축 1백만 총파업.

베네수엘라 총선

왜 ‘볼리바르식 혁명’이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는가?

김준호

12월 6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차비스타’(우고 차베스와 그 후계자인 현 대통령 마두로 지지자)가 1998년 총선 이래 17년 만에 의회에서 다수파 자리를 잃었다. 12월 7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차비스타’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주도한 선거 연합은 55석을 얻어, 우파 선거 연합 민주주의통합연석회의MUD의 107석에 크게 뒤졌다. MUD는 의석의 5분의 3 이상을 획득해, 부통령 혹은 장관을 단독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몇 년간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결과다.

베네수엘라는 무역 수익의 90퍼센트 이상, 정부 재정의 65퍼센트가 가이을 석유 수출 수익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최근 배럴 당 4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외환 보유액이 크게 줄어, 현물(원유)이나 금을 담보로 부채 이자를 상환할 돈을 조달해야 했다. 이조차도 원유 담보를 시가보다 낮게 셈했기 때문에 외채 규모가 5년 만에 갑절로 늘었다.

2013년 외환 위기로 물가가 크게 뛰며 공식적인 물가인상률이 1년에 50퍼센트를, 민간 통계로는 1백 퍼센트를 넘는 해가 이어졌다. 물가 인상 때문에 최저임금을 30퍼센트 인상해도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이마저도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이 떨어져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

생필품 수급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생필품 부족률이 평균 29퍼센트를 넘었고, 식용유·설탕·분유·옥수수·가루 등 일부 상품은 부족률이 85퍼센트에 이르렀다.

빈곤 때문에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살인율은 온두라스에 이어 2위다. (도시 하층민의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전국 대비 도시 지역 살인 비율도 카리브해의 소국 세인트키츠 네비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베네수엘라 우파는 경제 위기를 여당의 ‘통치 불능’을 입증할 기회로 봤다. 기업들은 고의로 생필품 품귀 현상을 일으켰고, 기업주들이 소유한 민영 언론은 차베스·마두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맹비난했다. 자본가들은 유명 회사를 마구잡이로 세워 외화 수익을 최대 20퍼센트 가까이 해외로 빼돌렸다.

사보타주

베네수엘라에서 자본가들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 집권 초기였던 2001년에도 자본가들은 석유 산업을 마비시키고자 고의로 사보타주를 일으켰다. 차베스가 국영 석유 회사 PDVSA의 수익 배분에 손을 대려 하자 반발한 것이다.



빈곤률 48퍼센트 세계경제 위기가 베네수엘라를 덮치자 민중의 삶이 파탄났다.

2002년 4월,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은 군부 보수파와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도시 빈민 수십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저항으로 좌절됐다.

같은 해 말 자본가들은 정유 공장을 폐쇄하고 석유 시추 기구에 고의로 고장을 일으켜 경제를 마비시키려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3개월간 자주 관리로 석유 산업을 가동하고 국가 경제를 돌린 끝에, 사보타주는 무력화됐고 우파들은 결정적으로 위축됐다. 이때의 승리로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은 부패한 어용 노총 CTIV에 반대해 새로운 민주 노총인 전국노동자연합UNT를 건설했다.

이런 일련의 저항들을 통해 차베스의 ‘볼리바르식 혁명’도 급진화했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며 민영화됐던 PDVSA의 재국유화를 추진했고,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이용해 주로 빈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복지 프로젝트 ‘미션’을 발족했다. 때마침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점령이 수렁에 빠지고 중국 등 신흥공업국 경제

가 급격히 성장해 유가가 폭등한 것도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대통령 차베스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자본가 계급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고도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동자 자주 관리 덕에 쿠데타를 막아냈음에도,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인 석유 산업에서는 자주 관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부와 생산수단은 여전히 자본가들의 손에 있었고, 부유층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석유 수출 수익에 기대어 복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경제적 지배력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차베스는 처음에는 자신이 주장으로 있는 국가기구를 활용해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이는 곧 난관에 부딪혔다. 차베스 이전 시기부터 국가 기구를 주무르던 관료들은 민중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종종 개혁에 반목을 걸었다.

차베스는 2002년 사보타주에 참여하지 않은 자본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자본가 일부에

게도 손을 내밀었다. 이들 ‘볼리부르게스’[볼리바르식 혁명]이 탄생시킨 부르주아라는 뜻으로, 친차베스 자본가들을 일컫는 말]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보장 하에 차베스를 지지했고, 차베스가 국가 관료를 우회하고자 만든 대규모 대중 정당 PSUV에도 참여했다.

‘볼리부르게스’와 국가 관료들이 사사로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노동자·민중이 2002년에 거둔 압도적 승리의 여파 속에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반

그러나 베네수엘라 경제가 침체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환 위기와 물가 인상으로 복지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미션’은 물자 부족으로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위기 전에는 하향세였던 빈곤율이 다시 치솟았다. 마두로 정부는 내수용 석유를 사실상 무상으로 공급해 왔는데, 가난 때문에 석유 밀무역이 크게 늘어 이웃 나라 콜롬비아와의 국경 분쟁으로 비화될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미션’을 운영하려 고군분투했던 기층 ‘주민자치평의회’ 활동가들의 좌절도 같이 깊어졌다.

생필품 판매 수익이 줄어들면서, 특히 ‘볼리부르게스’가 많았던 식품 가공 부문 자본가들부터 시작해 한때 차베스를 지지했던 자본가들이 줄줄이 반대파로 돌아섰다. 차베스와 그 후임인 마두로는 정부 재정으로 이들의 수익을 보존해 주려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반정부 우파들은 정부 공격에 기세를 올렸다. 이들은 언론을 통한 맹비난과 생필품 품귀 현상 조장을 일삼는 한

편, 반정부 거리 폭동을 일으켜 정부의 ‘통치력’을 공격했다. 그런 폭동 시도 중 하나로 2014년 2월에 일어난 ‘과림바’ 폭동은, 경제 위기로 고통 받는 중하층 중간계급 일부가 동참하면서 거의 1달 가까이 이어졌다.

차베스와 마두로가 노동자 파업과 대중 행동으로 우파에 맞섰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자본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차베스는 실질임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에 항의하는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때로 정부는 UNT의 임금 협상 제의도 거부했다.

“거리의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마두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림바’ 폭동 직후였던 2014년 6월, 베네수엘라 최대 식품 가공 기업 ‘폴라’ 소속 UNT 조합원들은 폴라 경영진이 고의로 품귀 현상을 조장하는 데에 항의해 창고 점거에 돌입했다. 그런데 마두로 정부는 노동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식품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베네수엘라 자본주의가 완전히 파탄 날까 봐 두려워한 마두로 정부는 자본가들과 타협을 시도했다. 베네수엘라 자본가들에게 “경제 전쟁”을 멈춰달라며 ‘과림바’ 폭동의 주범들을 석방했고, 외화를 유출하고 고의로 품귀 현상을 일으킨 “경제 전범”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자본가들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마두로가 물러서자 우파들은 더한층 기세를 올렸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우파들이 더한층 단단히 결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경화?

그렇다고 해서 우파의 기반이 더 확대된 것은 아니다.

12월 7일(현지시각) 현재 베네수엘라 언론들이 집계한 것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대략 7백50만 명 정도가 MUD를 지지한 듯하다. 이는 차베스 사망 후 우파들이 대거 결집을 시도했던 2013년 대선 때와 비슷한 수치다. 반면 PSUV는 6백만 표 가까이 얻은 듯한데, 이는 지난 대선에 비해 20퍼센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며, PSUV 당원 수와 대략 비슷한 정도다. 마두로 정부의 ‘개점 휴업 복지’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던 데 대한 실망감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2백만 명 정도가 투표에 불참한 듯 보인다.

그럼에도 우파들이 지지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이윤을 지키려 생필품 품귀를 조장해 사람들의 삶을 수렁에 빠뜨린 자들이고, 당선하자마자 친서민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버르는 자들이다. 우파들이 추진할 노골적인 긴축 정책은 민중의 삶을 더 어렵게 하면 했지 낫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 때문에 분노가 자랄 수 있다.

베네수엘라 민중이 우파들에 제대로 맞서려면, 2000년대 초 ‘볼리바르식 혁명’을 급진화시켰던 전투적 대중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석유 수출 수익으로 운영되던 대규모 복지 프로젝트 ‘미션’은 ‘차비스타’ 활동가들의 헌신인 노력에도 유가 하락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다.

사진: 로렌스 베네수엘라

서평 《선한 분노 — 자본에 저항하는 불온한 사랑》 급진화하는 청년들의 ‘선한 분노’가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양효영 대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올초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맞춰 나온 《선한 분노》는 ‘자본에 저항하는 불온한 사랑’이라는 부제처럼 자본주의의 불의를 통렬하게 고발한다. 오늘날 급진화하는 청년들의 정서와 생각을 많이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좌파적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읽히는 듯하다.

저자 박성미 씨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영화감독으로 2012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소재로 한 ‘희망버스, 러브스토리’를 제작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저자는 2011년 겨울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계기로 사회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맺은 인연으로 김진숙, 송경동 같은 노동운동 내 좌파적 활동가와 배우 김여진이 이 책을 추천했다.

2011년은 제2의 1968년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급진화와 투쟁의 물결이 일었던 해다. 이 책에는 그 일들을 함께 겪은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험들이 녹아 있다. 필자도 박성미 씨와 똑같이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며 눈물 지었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타고 영도다리를 건너가 최루액을 맞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체제에 대한 더 큰 물음들을 던지며 사회운동에 더 깊숙이 참여하게 됐다.

저자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부조리, 자본과 권력의 실체, 언론의 위선, 그리고 연대의 소중함과 승리의 가능성 등을 풀어냈다.

뒤집어진 세계

저자는 “이 글이 만약 힘을 갖게 된다면 학위도 전문성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공감일 것이다” 하고 썼는데, 정말이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공감하기 쉽게 폭로했다는 점이다.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저자는 책 전반에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만, 이 체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람을 살리라고 파업을 하면 신문에는 ‘영업 손실 몇십 억’이라는 기사가 났다. 그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게 해달라고,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달라고 파업을 하면 공권력은 그들을 복날 개 패듯이 패고 끌고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공권력 강제집행 덕분에 그 회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뉴스가 났다.”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잔인하게 진압한 조현오는 경찰청장까지 승진했고, 용산참사 살인 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됐다.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CEO가 보수를 반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노동자들이 해고된다. CEO는 이익에 대한 보상은 가장 먼저 가져가지만 손실에 대한 피해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떠안는다.”



2011년 단호한 점거 투쟁과 연대 확대를 통해 승리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은 많은 청년·학생들에게 영감을 줬다.



선한 분노

자본에 저항하는 불온한 사랑

박성미, 아마존의 나비, 248쪽, 12,000원

이 책의 장점 또 하나는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사회운동에 적극 참가한 저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점이다. 불의에 분노했지만 현실은 잘 몰랐던 소위 “강남좌파”였다는 저자는 이 두 투쟁을 경험하며 체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

경찰의 폭력,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사법체계 등.

“몰랐던 거다. 파업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기업이 어떤지, 이 나라가 어떤지 … 그리고, 뉴스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었다. 나라 한쪽에서는 용역이 집단으로 사람을 패고 폭행하고 있는데 포털의 메인에서는 한 연예인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더 중요했다. 그게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저자는 “최초의 승리의 경험, 이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토록 사람들이 싸우는지 아마 알 수 없을 것이다”라는 김진숙의 〈소금꽃나무〉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저자에게 (그리고 필자에게도) “최초의 승리의 경험”은 201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이었다.

체제의 민낯을 마주한 저자는 동시에 연대의 가능성도 느낀다. 저자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날라리 외부세력’을 만들고, 한진중공업 공장 담벼락을 넘고, 노동자들과 어우러지며 느꼈던 연대의 소중함을 생생히 전해 준다. 당시 필자도 투쟁 속에서 꽃피는 연대감과 동지애 등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텐트가 필요하다고 하니 텐트가 생겼고 난로가 필요하다고 하니 난로가 왔고 바자회 물품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 미디어에서 보는 ‘대중’은 바로 같았으나 SNS에서 발견한 ‘시민’들은 선하고 멋졌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때도 마찬가지였다. 연고도 없는 부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길바닥에서 하루를 꼬박 새우며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에 함께했다.

화수분

이 책은 쉽게 읽는 정치 에세이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한다. 저자의 주장이 글 전반에 흩어져 있어서 명쾌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여기저기서 반짝인다.

저자는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이 평범한 사람들의 사정이 좋아지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려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려 번 돈을 병원에서 다 쓰게 되면 그것도 경제성장이 되었다. … 시간을 사기 위해 과하게 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고, 돈으로부터 인간을 구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자는 이 사회에서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수분을 구매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 주장한다. “노동 소득은 내가 일하면 벌고 일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화수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끊임없이 나온다.”

여기서 ‘화수분’은 부동산, 은행 같은 금융자산이다. “화수분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는다. 화수분은 돈을 생산한다고 여겨지는데, 사람들은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은 틀렸다. 돈이 돈을 낳는 것이 아니다. 화수분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돈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전체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오로지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방식만 있을 뿐이다.

이런 분석은 저자의 정치적 결론과도 연결이 된다. 저자는 대형 브랜드를 소비하지 않기,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소비하지 않기, 누군가를 수탈하지 않는 윤리적 기업을 만들기 등으로 이윤 중심 체제를 개혁해 보려 한다. 물론 기본소득은 지지할 만하다. 그러나 개개인의 윤리적 소비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형용 모순이다) 만들기 등은 체제에 별다른 타격을 주기 어렵다.

또한 저자의 눈에 비친 노동자는 생산영역에서 집단적인 생산을 하고 그렇기에 집단적으로 이윤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거인이라기보다는, 소비 영역에서 파편화되고 원자화된 개인들의 통칭이다.

‘선한 분노’를 급진화 시키기

이처럼 저자가 주장하는 사회적 연대는 선한 개인들의 도덕적인 정의감에 바탕을 둔 연대다. 물론 이런 연대는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연대는 강점 만큼 약점도 크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저자는 괴물 같은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하는 이유로 “우리 안의 욕망”을 탓하는데, 기독교적 원죄론이 떠오르기도 한다.

따라서 분노한 우리는 사람들을 객관적이고 집단적인 이해관계로 묶어주는 ‘무엇’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계급’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저자가 아쉽게도 주목하지 않은 곳,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착취해 이윤을 만들어내는 생산영역을 주목해야 한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스물네 시간 생존하는 데는 반나절 노동이면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고 썼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에게 오직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주며 나머지를 가져간다. 이것이 이윤의 비밀이다.

이는 뒤집어서 노동자들의 작업 거부 즉, 파업이 이윤의 원천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 준다. 청년들의 ‘선한 분노’는 더 급진화해야 한다. 체제를 멈출 수 있는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인식한 ‘계급의 정치학’과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새로 나왔습니다!

자본주의 국가 —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크리스 하먼, 알렉스 캘리니코프 외 저, 최일봉 편저, 책갈피, 312쪽, 14,000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노동 개혁’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모는 정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고 누구의 편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 한편으로 얼마 전 그리스 시리자의 집권, 제러미 코빈의 영국 노동당 당 대표 선거 압승, 스페인 포데모스의 급성장 등 세계적으로 좌파적 개혁주의가 부상하면서 급진좌파가 자본주의 국가를 활용해 사회 개혁이나 변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 전 세계 좌파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 국가의 작동 방식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사회변혁 전략을 제안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글을 묶은 것이다. 1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역사적·변증법적으로 분석하며 자본주의 국가의 작동 방식과 그 형태를 심층 분석한다. 2부는 좌파적 개혁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사이의 전략 논쟁을 다룬다.

▶ 자세한 서평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최영준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했다. 곧바로 검찰은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1천5백 31명을 내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등도 밀어붙이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영장 없이 정치적 반대자들의 핸드폰 감청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 공세와 대대적인 불법·폭력 시위 여론몰이에도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고용·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올 ‘노동개혁’ 저지,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도심 행진을 했고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해외 ‘나들이’

해외 ‘나들이’를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는 마중 나온 새누리당 김무성에게 기업을 살릴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노동개혁’ 5대 법안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빨리 처리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을 ‘소요죄’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놔다. 소요죄 적용은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항쟁, 1986년 인천 5·3항쟁 이후 처음이다.

심지어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서울 도심 마비를 위해 불법 폭력 시위를 준비해 왔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위해 조계사 경내에 진입해 검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화쟁위는 12월 9일 오후 5시가 한상균 위원장 신변보호의 마지노선이라며 압박했다. 강신명은 이 발표 후 기다렸다는 듯 “8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 체포영장 집행 의사를 밝혔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파업으로 맞서자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노동자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연내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과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와중에 새정치연합은 규탄은커녕 국회 안에서 새누리당과 야합해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2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사실 새정치연합은 올해 내내 이런 구실을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노동개혁’

등 고통전가 프로젝트 추진의 디딤돌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했다. 박근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조차 부족하다며 거부할 정도로 강력한 개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때도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노동자 편인 양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국 새누리당과 야합했다. 지금도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의 배수진을 쳤고 새정치연합 대표 문재인이 ‘노동개혁’ 저지가 당연이라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원내대표 이종걸은 새누리당과 야합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새정치연합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중집은 12월 16일 하루 파업을 결정했다. 그런데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바로 임시국회 소집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동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이대로라면 12월 16일

은 이미 “노동개혁” 법안들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 법안 심사가 재개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개혁” 법안들이 철회될 때까지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가 연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파업으로 맞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 탄압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2015

노동자연대 후원의 밤

2015년 12월 15일 (화) 오후 6시 ~ 11시
하이델베르크하우스 호프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문의 02-2271-2395 | http://workerssolidarity.org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연대는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저항 운동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노동자연대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굳건히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지지와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연대에 힘을 보태 주신 동지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대와 희망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한층 전진하려는 노동자연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2015년 노동자연대 후원의 밤’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